

# 냉전, 민주화 이행 그리고 한국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40년의 성과와 의의

---

김 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 정치학 전공

kimwon@aks.ac.kr

---

- I. 머리말
  - II. 냉전 시기 한국학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1988
  - III. 탈냉전,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1997
  - IV.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아래에서 연구원: 1998-현재
  - V. 맺음말
- 

본 원고는 개원 40주년 학술대회인 “대전환기의 한국학: 새로운 100년을 향해”(2018년 6월 28일)에서 발표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술된 연구원 40년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필자인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 원고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허은 선생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I. 머리말

---

본 연구는 1978년 개원한 한국학중앙연구원(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개원과 더불어 냉전 하에서 80년대 민주화 이행 이전 시기, 민주화 이행 이후 90년대 후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도입된 현재까지 세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기관으로서 의의를 평가하고, 이후 나아가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sup>1</sup>

본 연구의 '기본 접근 시각'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간한 3권의 통사를 포함해서, 기존 한국학 연구기관 통사류가 지닌 문제점을 다소 극복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확인한 『동방학지』(연세대 국학연구원), 『민족문화연구』(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등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 산하 한국학 연구기관의 경우, 문서철 중심의 전공별, 시기별로 그 역사를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sup>2</sup> 다만 한국학 연구기관의 조직적 목표, 사업, 진행과정 등 자기발전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 기록되어, 한국학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힘이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연구기관,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과

- 
- 1 이하에서 연구원 명칭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변경 이전에는 '정문연'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이후에는 '한중연'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 2 최근 공간된 한국학 연구기관 통사로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국학연구사』(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대동문화연구원: 1958-2008』(200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민연 50년: 1957-2007』(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등 참조. 최근 한국학 학술기관, 학술지에 대한 평가는 김현주, 「『동방학지』와 국학, 동방학 연구: 『동방학지』를 통해 본 한국학 종합학술지의 궤적」, 『동방학지』 151(2010); 한기형, 「대동문화연구원 50년의 학술연구 성과: 대동문화연구원의 현재와 미래: 동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한국학의 재정립」, 『대동문화연구』 60(2007); 최기숙, 「1950-1960년대 인문학 학회지에서의 한국학 연구 구성의 특징: 개념·범주·방법론」, 『열상고전연구』 33(2011), 269쪽.

같이 탄생부터 정부에 의해 주도된 경우, 정부 정책, 연구기관 특수한 문화, 운영 체계의 특수성, 조직원 간의 의사소통과 조직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원은 개원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압력과 이로 인한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을 지녀왔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냉전, 민주화 이행이란 탈권위주의화에 따른 정부정책 변화 그리고 9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학술지원정책이란 다양한 외부적 힘을 염두에 두고, 연구원 내부에서 이를 연구/교육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국학학술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3가지 종류의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뤄졌다. 첫 번째, 기출판된 연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十年史』(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二十年史』(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30년사』(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8) 등을 검토했다.<sup>4</sup> 연구원 출판 자료 이외에도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1978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중요 일간지에 게재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관련 기사를 전수 검색해서 통사에 나오지 않는 외부적인 시선을 검토했다.

다음으로, 연구원에서 생산된 연구과제 및 목록, 기관지 『정신문화연구』(초기 『정신문화』), 출판물 및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문건을 검토했다.<sup>5</sup> 40년이란 역사만큼 광범위한 양의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원 역사를 정리하

---

3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란 과거의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거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여전히 그 경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지칭한다.

4 이하 각주에서는 『10년사』, 『20년사』, 『30년사』로 각각 줄여서 표기하도록 한다.

5 자체 연구과제의 시기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이형주 선생이 자료를 정리해 도와주었고, 본관에 보관 중인 각 년도 『이사회 철』 열람을 위해서는 김경재 선생이 협조를 해주었다.

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40년에 걸친 긴 역사를 다루는 만큼, 주요한 사건, 연구 과제, 연구원 내외적인 변화 시기 분위기와 논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23일에 걸쳐 본원에 재직하고 계신 15분의 교수님들에 대해 개인당 60분에서 120분에 걸쳐 구술면담을 진행했다.<sup>6</sup> 구술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강돈구, 권오영, 김건곤, 김복수, 서호철, 양영균, 옥영정, 이강한, 이길상, 이완범, 이종철, 임치균, 정순우, 정치영, 한형조, 이상가나다순)께 감사드린다. 그 외 개원 30주년 당시 수집한 구술자료인 『한국학중앙연구원 30년사 구술자료 수집 및 편찬』(2007년, 연구책임자 박병련, 구술면담 이완범)을 통해 자료화된 구술자료(전직 기관장 중심)도 동시에 검토했다.<sup>7</sup>

## II. 냉전 시기 한국학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1988

### 1. 개원과 정신문화

1950-1960년대 한국학은 냉전하 세계질서의 중심인 미국 대외정책 변화나 사상전의 일환으로 미국의 ‘지역학 지원 프로그램’이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냉전 하에서 미 공보원의 목표는 미국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 
- 6 구술면담 내용은 과거 연구원의 분위기를 당사자들이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구술면담 내용 가운데 다소 민감하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본문에서 구술자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인용’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 7 구술면담을 진행한 구술자는 김태길, 이돈찬, 윤병석, 류승국, 문홍주, 이현재, 한상진, 이상주, 장을병, 윤덕홍 등이었다.

증대시키는 것이었다.<sup>8</sup> 한국학 역시 동아시아학의 '주변부'로, 미국 동아시아학은 페어뱅크/라이샤워(『동양문화사』) 등에 의해 주도됐다.<sup>9</sup> 이들은 근대화론/크레믈린론에 기반해 정부와 일련의 연관 속에서 학문 활동을 전개했지만, 90년대 이전까지 한국학은 중국/일본학에 비해 '저발전' 상태에 머물렀다.<sup>10</sup>

다른 한편 60년대 후반 이후 학계의 자국사에 대한 시각은 영정조 시기 근대사회의 내재적 발전 가능성을 재구성한 내재적 발전론이었다. 이는 역사학에 국한된 흐름이 아닌, 국문학, 사상사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자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국학은 이 시기 상존했던 '민족의 위기'에 대해 성립했던 개념이자 이데올로기였다.<sup>11</sup> 동시에 정부도 민족중흥, 국적 있는 교육, 화랑도, 신라문화 등을 통한 자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했고, 역동적인 조선사의 상 구축이나 평민문화/실학에 대한 천착 등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었다.<sup>12</sup> 정부의 국학 진흥 정책은 식민지시기를 체험한 민족의 식민지 체질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sup>13</sup> 바로 정부의 한국학 진흥과 반체제

8 허은, 「냉전시대 동아시아지역의 미국학 확산과 '知的네트워크' 구축」, 『亞細亞研究』 60:1(2017), 111쪽 참조. 50-60년대 미국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이봉범, 「한미재단(American Korean Foundation), 냉전과 한미 하방연대」, 『한국학연구』 43(2016); 정종현, 「아시아재단의 "Korean Research Center(KRC)" 지원 연구」, 『한국학연구』 40(2016) 등 참조.

9 라이샤워의 동양학에 대한 탁월한 연구는 장세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동아시아,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 『상허학보』 36(2012).

10 채오병, 「냉전과 지역학: 미국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그 파열, 1945-1996」, 『사회와 역사』 104(2014), 311-312쪽.

11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검토는 윤해동, 「에피고넨의 시대,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묻는다」, 『민족문화논총』 47(2011); 김원, 「1960년대 냉전의 시간과 뒤틀린 주제: 시민의 시간과 민족의 시간」, 『근대화론과 냉전 지식 체계』(혜안, 2018) 등 참조.

12 이하나, 「유신체제가 민족문화 담론의 변화와 갈등」, 『역사문제연구』 28(2012), 47쪽.

13 《경향신문》, 1979년 9월 19일자.

진영의 주체적 학문으로 경도는 성향은 다르지만, 민족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재현할 한국학의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는 면에서 엇물려 있었다.<sup>14</sup>

정부 차원에서 1960년대 후반 이래 제2경제론, 국민교육헌장 등 정신문화에 대한 강조가 본격화됐다. 1978년 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신문화의 계발을 언급함으로써 ‘정신문화’는 중요 정책지표의 하나로 등장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정부가 제기한 민족문화 담론의 시기별 변화를 일별하자면, 1) 1968-1971년: 문화재의 발굴, 보호를 통한 민족문화육성 및 민족주체성의 강조<sup>15</sup>, 2) 1972-1975년: 민족중흥 5개년 계획을 통해 한편으로 사회적 기획으로서 ‘민족개조’를, 다른 한편 ‘국적 있는 문화’를 통한 체제경쟁을 강조, 3) 1976-1979년: 정신문화의 강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즉 개인주의/자유주의에 맞서는 한국적 전통으로서 충효 등을 통한 근대성의 재발명에 초점을 맞췄다.<sup>16</sup>

유신 시기 민족문화의 자긍심이 강조됐던 맥락으로는 냉전하 남북간 적대적 대쌍관계, 체제경쟁으로서 사상전을 들 수 있다. 60년대 들어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민족 정통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랫동안 망각해 온 민족전통, 민족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바로 낙관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남한의 ‘민족문화’를 부각시키는 문화적 측면에서 체제경쟁이 전개됐다.<sup>17</sup> 이 시기 민족문화라 함은 민족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적자로

---

14 이태진·임형택·조혜정·최원식, 「좌담: 지구화시대의 한국학: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의 긴장」, 『창작과비평』 25(2)(1997), 8-62쪽; 김원, 「한국적인 것의 전유를 둘러싼 경쟁: 민족중흥, 내재적 발전 그리고 대중문화의 흔적」, 『사회와 역사』 93(2012), 185-200쪽.

15 이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1998); 김원, 「발굴의 시대: 경주 발굴, 개발 그리고 문화공동체」, 『史學研究』 116(2014) 참조.

16 이하나(2012), 앞의 논문, 52-59쪽.

17 서은주, 「1970년대 ‘민족문화’ 담론과 한국학」, 『어문논집』 54(2013), 387쪽.

서 남한의 ‘국민문화’로서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었다.<sup>18</sup> 『조선왕조실록』 국역사업을 남과 북이 각각 별개로 완성했던 것이나 1960년에 출간된 북한 『조선철학사』에 맞서기 위한 ‘대북경쟁사업’으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구상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sup>19</sup>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냉전 아래 사상전의 인식론적 전제는 ‘서구화 없는 근대화’란 사실이다.<sup>20</sup> 1960년대 ‘제2경제론’에서 출발해 70년대 중반 ‘정신문화’로 이어지는 ‘민족문화의 재전위’ 현상은 ‘부정적인 것’으로서 서구적인 것을 고정시키고, 근대화를 추구하되 ‘서구적인 것이 아닌 무엇’을 찾는 ‘민족문화’라고 불리는 결핍을 채우는 과정이었다.

정부주도로 연구원이 만들어졌던 것은 앞서 말한 정부정책과 지식사회의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었다. 정부가 주도했던 정문연의 초기 성격은, 전술한 민족문화라는 범주 속에서 민족주체성을 강화하는 국학 연구기관이었다. 1977년 1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치(안)」에는 설립 목적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사상 및 윤리를 재발견하고 민족의 슬기로운 얼을 되살려, 이를 국민지도층에게 고취함으로써 주체성이 희박한 국민정신을 고무, 발양, 심화하여 나아가 민족중흥의 기운을 진작”한다고 규정했다.<sup>21</sup> 이 과정에서 한국사, 국학 강화에 대한 학계 의견의 수렴을 위해 1977년 9월 준비위원회가 제1분과인 사학/철학(김철준, 김열규, 김용섭, 이기영 등), 제2분과 윤리학/사회학(김경동, 임희섭, 이돈희, 김형효), 제3분

18 이하나(2012), 앞의 논문, 41쪽.

19 김태길 구술자료, 면담 이완범(2008); 조동일은 북한이 먼저 하지 않은 사업은 대북경쟁사업이 아니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조동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나아가갈 방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의 회고와 전망』(한국학중앙연구원, 2017년 6월 22일), 14쪽).

20 황병주,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탈후진 근대화’ 담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2008), 239-250쪽.

21 『30년사』, 67쪽.

과 교육학(이상주, 이규호 등) 그리고 마지막 4분과 고전/한문학(윤남한, 유승국 등)으로 이뤄졌다.<sup>22</sup>

냉전시기 한국학의 기원이 식민사관의 부정에 입각해 자기의식,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근대화라는 국가이익에 복무하는 방향성이 내재했듯이<sup>23</sup>, 정문연의 출발도 국가정책과 학문생산주체간의 욕망이 ‘한국문화’라는 범주를 통해 결합되어 시작된 셈이었다. 당시 어느 곳에서도 학제 간 연구를 수월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 민족문화라는 범주로 한국학을 집대성하고자 한 것이다. 양자의 보편적인 것(세계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민족문화를 다시 위치시켜 보편을 통한 인정투쟁이 전개된 셈이었다.<sup>24</sup>

정문연 창립 당시, 설립추진본부를 맡은 김태길은 정신교육을 위한 연구원이 아닌, 순수학술연구기관을 지향했다.<sup>25</sup> 1978년 6월 28일, 이선근 원장, 김태길 연구부원장, 고광도 관리부원장이 정식으로 임명되고, 1980년 1월 22일, 국학 중심으로 기구 개편이 진행된다. 1차 기구개편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연구 및 관리 부원장 통합, 연구1부, 연구2부를 통합, 문헌자료부 신설, 대학원, 교학부 신설, 연찬부 및 기획실 폐지 등 일련의 조치는 국학 중심의 연구부 통합과 국학자료 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내 학계의 분과학문별 미분화, 연구지원비 지원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연구비 및 학제간 연구의 조건 마련이 정문연의 <존재근거>를 제공해줬다. 단적인 예로 1980년 정문연의 구비문학/방언 연구로 시작될 학계내 공동연구 흐름은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에도 확산되기도 했다.<sup>26</sup> 당시 국학연구를 위한 학술연구기관으로서 프라이드는 재직 중이던

22 『10년사』, 5쪽.

23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사회와 역사』 64(2013), 159쪽.

24 서은주(2013), 앞의 논문, 381쪽, 383-384쪽; 이하나(2012), 앞의 논문, 61-62쪽.

25 『20년사』, 6쪽.



연구원, 대학원생들의 기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의미 있는 기관”, “공지를 가질 만큼의 프라이드”나 “학제간 연구/교육은 신선한 충격”이자 “마음이 설레는 시야를 넓히는 공부”, “거룩한 과제”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대학원생들에게도 병역혜택, 장학금 혜택, 해외답사, 학비면제 등 “학술특기자”로서 우대를 받았다. 당시 일반 대학원에 비해 여러 전공 분야의 수준 높은 교육이 실시된 대학원인 동시에, 사회과학을 국학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진 드문 대학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어느 전공이든 한문을 배워야 했으며 수업시간이 매우 빠빠한 것으로 일반대학원과 구분되었다.<sup>27</sup>

80년대 초반까지 정문연의 매년 연구계획이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내외의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sup>28</sup> 개원 직후 연구실별 계획을 보면, 어문학연구실 전국 방언조사를 위한 협의회(1978년 8월 18일), 윤리연구실 사회윤리 연구방향에 관한 협의회(1978년 8월 18일), 어문학연구실 전국 구비문학 조사연구를 위한 협의회(1978년 8월 25일), 고전번역연구실 한국사상사자료집(국역판) 발간을 위한 협의회(1978년 9월 1일), 고전자료연구실 국학 기본자료 편찬을 위한 협의회(1978년 9월 8일), 사회연구실 한국사회연구의 과제개발을 위한 협의회(1978년 9월 22일) 등이었다. 당시에 개진된 주요 연구방향은, 종합적이고 장기적 과제, 외부 연구자와 공동 연구, 개방적인 연구원으로서 지향성 등이었다.<sup>29</sup>

이처럼 정문연이 순수연구기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니면서도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정문연은 국민정신교육기관이어도

---

26 「국학계 공동연구첩」, 《경향신문》, 1982년 2월 16일자.

27 조동일, 『학문에 바친 나날 되돌아보며』(지식산업사, 2004), 181-182쪽.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금년도 연구계획 확정」, 《경향신문》, 1980년 6월 13일자; 《동아일보》 1981년 4월 16일자.

29 『20년사』, 32쪽.

대학원은 국학연구에 힘쓰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도 존재했고<sup>30</sup>, 연수 및 연찬 등 이데올로기적 문제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했지만<sup>31</sup>, 설립 초기부터 학제간 연구 및 중장기적 학제간 연구 목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했다.

## 2. 신군부 집권과 국학 연구기관으로서 위상 변질

1979년 10·26 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정치적 자유화가 도래했지만, 5·18 민주화운동 압살을 포함한 다단계 쿠데타로 집권 정당성이 취약한 전두환 정권은 북한과의 사상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문연에 국민정신교육에 대한 강조 및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압력이 시작된다. 전두환은 잇따른 정문연 방문으로 연구원 기능의 변질을 강제했다. 이는 당시 신문 1면에 집중 보도됐다. 대표적으로 1982년에도 “국민의 정신교육,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요람이 되어 전 국민이 북한과 이념투쟁 및 사상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 막연한 학술적 연구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을 정문연에게 주문하기에 이른다.<sup>32</sup>

그 시작이 「국민정신교육 강화를 위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편방안」이었다.<sup>33</sup> 이후 「국민정신교육 종합대책 수립」 정책 연찬 개최(1980년 8월 20일)<sup>34</sup>, 1981년 1월,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원장을 국학 담당과 국민윤

30 조동일(2004), 앞의 책, 171쪽.

31 김태길 구술; 이상주 구술, 이완범 면담, 2008년 4월 1일.

32 「의식개혁 이론적 뒷받침을」, 《동아일보》, 1982년 4월 16일자.

33 이 자료는 1980년 당시 이사회 회의 자료로 배포된 것으로, 당시 문교부에서 1980년 7월에 작성해 정문연의 개편이 정부 차원에서 계획되었음을 보여준다. 주된 방안은 교원재교육, 건전한 청소년상, 공무원 교육 등을 강조하면서, 기대되는 한국인 상으로 국가관과 역사관이 투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책임질 줄 아는 한국인, 반공/안보의식이 확고한 한국인 등을 목표로 상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리 담당의 2인으로 하며, 연구부를 국학연구부와 국민윤리연구부로 분리하고 연찬실을 다시 연찬부로 부활시키는 등 국민정신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sup>35</sup> 이듬해 4차 기구개편에서 연찬사업 강화 및 연구사업에 사회과학 분야의 인력이 강화됐고, 1983년 2월, 류승국 원장 취임 이후 정부는 정문연을 국학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국민정신교육의 총본산으로서 기능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역사학과/국민윤리학과만 남겼으며, 1984년 전체 사업의 10.3%를 국민정신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국민윤리교육의 총본산을 천명한다.<sup>36</sup> 1985년엔 학제간 연구를 위한 필요성에서 '협동연구실'이 만들어 졌는데, 실제 연구된 것은 「대학가 유인물/간행물을 통한 운동권의 경향 분석」, 「공산주의 비판 연구」, 「반공교육의 현황과 개선책」 등 국민정신교육과 연관된 내용이었다.<sup>37</sup>

뿐만 아니라, 연구사업의 무게 중심도 이동한다. 연구과제는 국민정신교육의 이론적 탐색과 체계화/개발에 맞추고 기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한 교육과정과 자료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1981년에는 국민정신 순화를 위한 국민윤리, 민주적 가치관 확립, 산업화 시기 사회정의 등에 맞추며 각종 연찬 강화를 천명한다.<sup>38</sup> 1981년 특별연찬에서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반공교육 재검토가 시급하며 수준 높은 정치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sup>39</sup>

34 『20년사』, 28쪽.

35 국민윤리연구실은, (1) 올바른 역사관/국가관, 새시대에 적용될 가치관 및 국민정신교육이념 정립과 연구, (2) 국민윤리교육 내용 편성 및 체계화 방안 연구, (3) 반공, 안보의식, 건전한 국민윤리 재정립 방안을 그 역할로 삼았다. 「정문연의 실질적 재건을 기대한다」, 《경향신문》, 1980년 10월 28일자; 『10년사』, 7쪽 참조.

36 《경향신문》 1983년 2월 14일자; 《동아일보》, 1983년 2월 16일자; 《경향신문》, 1984년 5월 17일자.

37 『10년사』, 35쪽.

38 『20년사』, 94쪽; 《경향신문》, 1981년 2월 5일자.

1982년 정재각 원장 취임이후 정책연구기관이란 지향 속에서 핵심 보직자가 사회과학계열로 채워지고, 기존 48% 차지하던 이론연구는 16%로, 정책연구는 22%에서 52%로 재설정됐으며<sup>40</sup>, 문교부 지침에 따라 공산주의 비판서 출간이 거듭된다.<sup>41</sup> 뿐만 아니라 민정당이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을 공무원들에게 강의하는 특강에 적극 참여하는 정문연 구성원도 있었다.<sup>42</sup>

이 시기 대학원교육체계도 국민정신교육을 중심으로 변화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1 참조). 80년대 내내 10차례에 가까운 정관개정과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와중에, 1982년 7개 학과 14개 전공/현대이데올로기론, 한국사관론, 사회과학방법론 등을 필수과정으로 강화했다.<sup>43</sup> 당시 문교부는 역사학과/국민윤리학과 이외 학과 폐쇄 및 교명을 '부속대학원'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1982년 이사회를 통해 특수대학원 발전안을 결정했다.<sup>44</sup> 이어 1983년 3월 15일, 6차 기구개편을 통해 연구부를 기초연구부로 변경하고, 연찬부를 국민정신교육부로, 대학원 교학부를 교학실로 축소했다. 1987년 2월 14일, 문흥주 원장 취임 후에는 이념사상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 운영의 특성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을 국민윤리 중심으로 개편해 이념사상중심으로 대학원을 특성화하기에 이른다. 당시 역사학과 교육과정은 주체적 역사관 정립에 기본이 되는 역사이론/사상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윤리학과는 건전한 가치관 수립에 직결되는 사상 교육으로 개편했다.<sup>45</sup> 그 결과, 적지 않은 교원들은 다른

39 《경향신문》 1981년 1월 27일자.

40 《동아일보》, 1982년 4월 16일자; 《동아일보》, 1982년 6월 1일자.

41 「종속이론 비판 연구」, 《경향신문》, 1985년 11월 19일자.

42 「공무원에 내각제 개헌 특강 바람」, 《동아일보》, 1986년 9월 4일자.

43 「한국학대학원 전공과목 대폭 확대」, 《경향신문》, 1982년 2월 24일자.

44 『20년사』, 36쪽.

45 당시 석사과정의 필수과목을 보면, 역사학과는 한국사상사, 이데올로기론, 한국 민족문화론, 역사이론, 사적강독, 민족사관론, 한문, 논문연구 등이었고, 국민윤

표1-한국학대학원의 변천: 1979-1989

| 승인일       | 내용                                     | 학과                          | 석사 정원 | 박사 정원 |
|-----------|--|-----------------------------|-------|-------|
| 1979. 12. | 한국학대학원 설립인가                            | 1개 학과/7개 전공                 | 70    | 42    |
| 1980. 11. | 일부 전공 분리 및 음악사학<br>신설                  | 1개 학과/9개 전공                 | 90    | 54    |
| 1982. 07. | 학과 증설                                  | 1개 학과/14개 전공                | 280   | 210   |
| 1983. 03. | 부속대학원 명칭 변경 및 2개<br>학과로 조정<br>특수대학원 방침 | 역사학과/국민윤리학과                 | 80    | 60    |
| 1983. 12. | 전공 세분화                                 | 역사학과(4개전공)/국민윤리<br>학과(4개전공) | 80    | 60    |
| 1985. 07. | 전공 조정                                  | 2개 학과/8개 전공                 | 80    | 60    |
| 1989. 01. | 한국학대학원으로 명칭 복원 및<br>전공 변경              | 1개 학과/7개 전공                 | 60    | 60    |

\* 『20년사』, 360-361쪽.

대학으로 이직했고 대학원생들은 일반대학원으로 옮겨 갔고 교수들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고 당시를 많은 이들은 기억하고 있다.<sup>46</sup>

이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내내 중장기 대형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전술한 ‘민족문화’의 내용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방언과 구비문학 연구, 음악사와 미술사 연구, 한국사 기초 자료, 국어학, 일제침략과 독립운동, 이산가족 그리고 후술할 3대 대계 사업이 80년대 내내 꾸준히 진행되어 한국학 연구의 인적/제도적 네트워크를 확산시켰다. 아래 <표2-연도별 연구과제수, 연구과제 참여자 수, 연구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

리학과외의 경우 한국사상, 이데올로기론, 공산주의혁명전략,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남북한체제비교 및 통일론, 현대급진이론비판, 원전강독, 논문연구 등이었다(『10년사』, 119쪽, 116-117쪽). 동시에 1985년 연구과제 제목도 “선진문화창조”, “주체적 민족사 재구성을 위한”, “민족사관에 입각한” 등의 국민윤리적 측면을 부가했다.

46 조동일(2004), 앞의 책, 176쪽, 185쪽.

표2-연도별 연구과제수, 연구과제 참여자 수, 연구비: 1978-1989

| 연 도  | 연구과제수  |     | 연구 참여자수 |    |     | 연구비<br>(단위: 천원) |
|------|--------|-----|---------|----|-----|-----------------|
|      | 전체     | 세부  | 전체      | 원내 | 외부  |                 |
| 1978 | 19     | 42  | 47      | 3  | 44  | 47,599          |
| 1979 | 35(3)  | 116 | 127     | 10 | 117 | 289,254         |
| 1980 | 53(3)  | 105 | 124     | 9  | 115 | 29,244          |
| 1981 | 49(8)  | 206 | 249     | 27 | 222 | 606,077         |
| 1982 | 85(30) | 199 | 206     | 50 | 156 | 505,800         |
| 1983 | 38(8)  | 120 | 159     | 53 | 106 | 276,400         |
| 1984 | 54(10) | 178 | 223     | 79 | 144 | 643,000         |
| 1985 | 51(9)  | 146 | 160     | 59 | 101 | 581,300         |
| 1986 | 40(17) | 186 | 205     | 67 | 138 | 575,600         |
| 1987 | 51(26) | 109 | 172     | 65 | 107 | 380,050         |
| 1988 | 58(10) | 145 | 196     | 90 | 106 | 510,400         |
| 1989 | 50(2)  | 62  | 134     | 79 | 55  | 218,100         |

\* 연구과제수의 ( )에 있는 수는 필자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민윤리 및 이념관련 연구임.

1980년부터 50개 내외의 과제가 진행됐고 연구참여자는 초기 120여 명에서 점차 200여 명을 상회했으며, 매해 100명 이상의 외부 연구자의 참여가 이뤄졌다.

우선 대표적인 연구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하 민백)이었다. 먼저 『민백』은 3,900여 명이 참여했던 대규모 한국학 네트워크의 과정이었다. 당시 민백 편찬은 식민지 체험으로 왜소/열등화되고 부정적으로 보는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상정됐다.<sup>47</sup> 민백은 외국 사전인 브리타니카와 달리, 기존 백과사전을 번안하는 것이 아닌 외래문화에 대응할 민족문화를 우선시했던,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백과사전이었다.<sup>48</sup> 1978년 12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민족 문화를 한 눈으로

47 《경향신문》, 1984년 11월 2일자.

48 서은주(2013), 앞의 논문, 386쪽; 조동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나아갈

볼 수 있는 대백과사전 편찬계획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에서 민백 편찬사업은 시작됐다. 이후 1979년 2월 7일에 다시 박 대통령은 정무1 비서관에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을 지시했다. 마침내 1980년 3월 19일, 정문연 2차 기구개편에서 민백 편찬사업이 정문연으로 이관됨에 따라 55억 예산으로 백과사전편찬부가 연구원의 한 기구로 발족하게 된다.<sup>49</sup> 민백은 한국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특별기획항목’에 백두산, 한강, 소나무, 소, 봄, 놀이, 사랑 등을 설정해 ‘민족문화’의 총람으로 성격을 지니게 됐다.<sup>50</sup>

또 하나의 대형 학술연구사업은 3대 대개 사업으로, 1983년 7월에 <한국정신사대계>(이하 한국사상사대계로 명칭 변경)·<한국사회사대계>·<한국자료사대계>라는 명칭의 3대 대개사업은 개원 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통하여 논의한 후 시작됐다.<sup>51</sup> 1990년까지 지속된 대개사업은 학계 광범위한 역량이 사상사, 사회사 등 영역에서 집결해 진행된 대규모 연구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연도별 주요 연구사업을 개괄해보면 아래 표3과 같다.

---

방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의 회고와 전망』(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13쪽.

49 그 뒤에도 잦은 편찬부장 교체, 사전편찬부 실무진 구성상 문제, 5년이란 짧은 기간상의 문제 등이 재차 지적되곤 했다. 「민족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전면재검토」, 《경향신문》, 1982년 4월 5일자.

50 조동일(2017), 앞의 글, 17쪽.

51 「정문연, 대규모 학문정리사업」, 《동아일보》, 1983년 6월 27일자; 『20년사』, 71-72쪽.

표3-연도별 중점 연구과제: 1980-1988

| 연도   | 주요 연구과제   |
|------|---|
| 1979 | 민족문화(한국근대문화에 대한 연구), 방언(전국방언조사연구), 구비문학(전국구비문학 조사연구)  |
| 1980 | 한국문화(한국문화사 재구성을 위한 자료연구)  |
| 1981 | 사상사(한국사상의 제 문제에 관한 철학적 연구), 종교사(한국고대 종교사상의 특성연구 등), 민족문화(한국문화사 재구성을 위한 자료연구), 교육사(한국교육의 이론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등), 미술사/음악사(한국 전통예술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 구비문학(전국 구비문학 조사연구) |
| 1982 | 한국사기초자료(한국사재구성을 위한 기본자료 연구), 구비문학(구비문학 조사 연구), 국어학(국어 순화과 어문정책에 관한 연구 등)  |
| 1983 | 사상사대계(종교사상), 일제침략/독립운동(일제침략하의 한국사 연구), 구비문학(전국 구비문학 조사연구)   |
| 1984 | 정신사대계(종교편), 사회사대계(근대 현대 사회구조의 특질과 변동 등), 독립운동/일제침략, 이산가족  |
| 1985 | 사상사대계(삼국시대/통일신라편), 고대 한일문화(고대 한일문화관계), 국어학(현대국어의 지역 변이 조사 연구), 사회사대계(총 25개 소주제)   |
| 1986 | 사상사대계(고려시대편, 총 15개 소주제), 사회사 대계(총 26개 소주제)  |
| 1987 | 사상사대계(조선전기, 총 13개 소주제), 사회사대계(총 24개 소주제)  |
| 1988 | 사상사대계(조선후기, 총 15개 소주제), 사회사대계(총 15개 소주제), 연구사(사회과학분야의 분야별 학술동향 분석)  |
| 1989 | 사상사대계(근대편, 총 15개 소주제)   |

\* 중점연구 과제는 원내의 연구진이 대거 결합한 대형 연구과제를 필자가 지칭한 것임.

### 3. 민주화 이행과 연구원 위상을 둘러싼 갈등

신군부가 퇴장한 1987년 민주화 이행, 7-9월 노동자대투쟁 와중에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위상 변질에 대한 정문연 내부적 문제제기 및 반발이 이어졌다. 1987년 10월 18일, 연구원의 일부 교수들이 국민정신교육 기능을 배제하고 연찬사업을 폐지하는 등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정문연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건의서에 연대 서명했고 같은 해 11월 대학원 동문회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sup>52</sup> 이듬해 정문연 전직교수 27명도 성명을 통해 정문연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다.<sup>53</sup>



이후 6인의 위원으로 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1988년 5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전계획연구」 보고서를 발간한다.<sup>54</sup> 1988년 결성된 정문연 노조, 대학원 학생회, 동문회 등 주도로 어용교원, 국민윤리 교육, 지도자간담회 폐지, 운영 민주화, 명칭 변경 등 주장이 확산된다.<sup>55</sup> 같은 6월 20일 문교부 주최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전연구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문연 발전방향 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교부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전방향’이라는 제하의 공청회에서 명칭, 설립목적, 연구와 연찬의 기본방향, 부속대학원, 조직 및 기구 등에 관해 논의했지만, 6월 28일에 부속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 50여 명이 연구원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만든 원장 및 집행부 퇴진, 정치 어용교수의 퇴진, 연찬기능의 폐지, 대학원 체제의 설립 당시로의 환원 등을 요구하며 시위가 거듭된다.<sup>56</sup> 이사회 재계출신임원을 학계인사로 교체, 문교부 예산편성 개입 배제,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이 당시 주된 요구 사항으로 확인된다.<sup>57</sup>

이처럼 1988년을 정점으로 정문연의 내부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는 연구원 존재의의에 대한 밑으로부터 구성원들의 질문의 형태를 띠었다. 대표적 사례로 1988년 6월 30일, 개원 기념식과 개회식이 식당 내 시위로 무산된 것을 들 수 있다. 3박 4일 일정의 국제 학술회의는 계획대로 진행됐지만, 문홍주 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보직 교수들도 사표를 제출했다. 뒤이어 7월 3일, 대학원 동문회 및 석·박사과정협의회, 연구원 일동, 노동조합 등 4자 합의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편에 관한 건’ 서한을

52 「정문연, 진로놓고 진통」, 《경향신문》, 1987년 11월 13일자.

53 「건의서」(1988년 1월 18일).

54 『20년사』, 67쪽.

55 「정문연 개편에 관한 우리의 견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동문일동, 1988년 6월 18일).

56 「우리의 고뇌에 찬 결단」(대학원 석·박사과정협의회, 1988년 7월 7일).

57 『20년사』, 68쪽.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7월 6일엔 정문연 교수회의 명의로, '본원은 한국학 연구의 중심기관이 되어야 하며, 기구 개편의 재조정과 부속대학원 축소 반대 및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된다. 이후 1988년 12월부터 연구자율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2명을 포함하는 등 단체협약 59항에 합의해 타결되기에 이른다.<sup>58</sup>

### Ⅲ. 탈냉전,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1997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사회 여러 차원의 변화 속에서 정문연은 위상 재정립을 요구받았으며, 이는 '명칭 변경'으로 상징됐다. 1988년 국정감사에서 정문연 명칭변경, 통폐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물론 개원 직후 초창기부터 통폐합 논의는 존재했지만 당시엔 정문연 중심의 통합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정문연이 통폐합의 대상이 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4년 3월 15일, 김숙희 교육부 장관 정문연 방문을 전후로 제기된 뒤 정부산하 기관 통폐합 논의였다.<sup>59</sup> 이후 1996년 181회 국정감사시 명칭변경이 국회에서 권유되자 1996년 12월 17일 김태길, 김운태, 이돈희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및 위상정립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시 1997년 10월 1일, 제185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이 한국학연구의 전문적 학술연구기관으로 정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내부적인 명칭 변경 및 한국학 중심기관으로서 위상 재확립 요구를 수용했

58 《동아일보》, 1989년 1월 4일자; 《한겨레》, 1989년 1월 5일자.

59 「정부산하기관 통폐합 회오리」, 《매일경제》, 1995년 1월 6일자.

다. 1997년 12월 16일, 이사회를 거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및 “한국학 진흥” 및 정관에 “향토자료 수집”, “한국학 확산을 위한 국내외 학계와 협력” 등을 추가하고 정신통화를 ‘한국학’으로 구체화하고 설립목적 을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경했다.<sup>60</sup>

학술연구기관으로 위상 재정립 과정에서 정문연은 위상, 연구예산 및 사회적인 관심이란 차원에서 여러 한국학 연구기관 가운데 ‘하나’가 됐다. 단적인 예로 표4 연구비 규모를 보면, 1989년 2억으로 50% 삭감된 이후 1997년 즈음에야 회복한다. 세부연구과제수도 1987-1988년까지 최대 100 개 남짓이었다가, 1991년 이후 100개 이하로 급락했으며 외부 연구참여자 수의 경우에도, 1988년까지 100명 가까이 참여했지만, 1989-1996년 100명 대 이하로 줄어들었다.

표4-연구비 연도별 추이: 1989-1997

| 연 도  | 과제수 |     | 연구 참여자수 |    |     | 연구비<br>(단위: 천원) |
|------|-----|-----|---------|----|-----|-----------------|
|      | 전체  | 세부  | 전체      | 원내 | 외부  |                 |
| 1987 | 51  | 109 | 172     | 65 | 107 | 380,050         |
| 1988 | 58  | 145 | 196     | 90 | 106 | 510,400         |
| 1989 | 50  | 62  | 134     | 79 | 55  | 218,100         |
| 1990 | 53  | 103 | 151     | 72 | 79  | 343,728         |
| 1991 | 58  | 58  | 137     | 70 | 67  | 299,160         |
| 1992 | 47  | 47  | 110     | 54 | 56  | 188,462         |
| 1993 | 41  | 46  | 133     | 70 | 63  | 222,390         |
| 1994 | 40  | 40  | 149     | 68 | 81  | 264,380         |
| 1995 | 48  | 48  | 178     | 77 | 101 | 398,250         |
| 1996 | 48  | 48  | 149     | 78 | 71  | 380,850         |
| 1997 | 47  | 47  | 214     | 84 | 130 | 502,700         |

60 『20년사』, 164-165쪽.

이런 상황에서 1989년 이현재 원장 시기는 80년대 연구원내 존재했던 두 가지 흐름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정문연이 학술연구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80년대 국학과 권위주의 정권의 이데올로기 교육에 동원된 두 가지 흐름간의 치유를 시도했다. 그만큼 당시 분위기가 “흑백만연 시기”, “전쟁터에 가는 기분” 등으로 이야기되듯이 내부적인 분산/해체 흐름이 강했던 시점이었다.<sup>61</sup>

동시에 한국학연구기관으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각종 발전위원회, 발전안 논의가 진행됐다. 1990년 10월, 「2000년대를 향한 한국정신문화연구과 한국학대학원의 발전구상」에서는 국가경영적 차원의 연구수요에 부응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수요에 따라 좌우되는 어용기관이 아닌, 국민적 수요에 봉사하는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했다.<sup>62</sup> 모든 연구과제의 객관적이고 학술적 검토를 위해 원로 중심으로 연구운영위원회(1990년 2월 22일) 설치 및 운영<sup>63</sup>, 연찬 기능을 학술세미나, 포럼 등으로 변경,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해외한국학 지원 등 외부가 아닌, 정문연 자율적인 프로그램에 기반한 연구결과를 강조했다.<sup>64</sup> 1992년에는 「연구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선정의 제도적 민주화, 사업선정의 효율화를 위한 기획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 합동운영, 연구실별 과제 설정시 토론에 기초한 공동연구 모색 등이 제안됐다. 1994년 4월 19일, ‘연구원발전 특별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해 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전계획(안) 보고서’가 제출됐다. 1996년 12월 17일에는 제1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칭변경 및 위상정립에 대한 워크숍이 개최됐다. 같은 시기 연구부 통합(1996)과 연구직이 실질적으로 폐지됐

61 이현재 구술, 이완범 면담(2008년 5월 7일), 호암재단 이사장실.

62 『20년사』, 113쪽.

63 『20년사』, 116쪽.

64 「정문연, 지배논리 개발하는 곳 아니다」, 《동아일보》, 1990년 5월 17일자.

고 학제간 연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공계열별 연구실을 폐지하고 연구부로 운영하기 시작했다.<sup>65</sup>

하지만 민주화 이행 시기 국민정신교육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기보다, 봉합되어 외양만이 변화한 국면이었다.<sup>66</sup> 80년대 갈라진 구성원 간의 틈새가 겹으로는 화해된 것처럼 보였지만,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구체적인 변화”가 이뤄지진 못했다. 이는 이전 시기 연구에서 협업체제 붕괴/역량의 개별화에 따른 정문연의 특성 상실과 조직의 안정성에 안주했던 흐름이 공존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도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재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1991년 해방이후 최대 문화사업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 27권(200자 원고지 42만매 분량, 필자 3,900명)이 12년 만에 완간<sup>67</sup>된 이후 대안적 사업 가운데 하나로 ‘국학진흥사업’이 모색됐다.<sup>68</sup> 1990년 고전국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외부의 지적에 따라, 정문연내 아직 정착되지 못했던 전적정리가 정관에 명기된다.<sup>69</sup> 또한 1993년 5월 교육부 지원으로 국학진흥사업을 총 10년간 추진할 것이 결정된다. 몇 가지 연구의 결과물로는 「구결자료집」, 「결송유취보」 등 조선 후기 사회사의 중요한 고문서 자료 연구와 근현대 사료 발굴이 이뤄졌다.<sup>70</sup> 이후 주요 가문 고문서의 발굴, 『고문서집성』 시리즈 및 장서각

---

65 「정문연 대대적 조직개편, 한국학 연구중심 변신시도」, 《한겨레》, 1996년 3월 19일자.

66 이 시기에도 여전히 연구과제 속에 남아있는 80년대 국민정신윤리, 이념교육의 유산도 공존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67 「민족문화대백과 12년 만에 완간」, 《한겨레》, 1992년 1월 17일자.

68 「해방이후 최대문화사업 평가」, 《경향신문》, 1989년 12월 21일자.

69 「고전 국역정리 시급하다」, 《동아일보》, 1990년 2월 13일자.

70 「새로운 자료, 해방 3년사」, 《경향신문》, 1990년 12월 1일자; 「미군정청 관보 4권 꺼내」, 《동아일보》, 1991년 4월 16일자; 「정문연 국학진흥연구 알찬 결실」, 《경향신문》, 1996년 8월 28일자.

소중 귀중본 도서 해제 등이 진행됐으며, 1997년에는 연구비도 3억 원으로 증액되었다.<sup>71</sup>

아래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선 전근대 시기의 연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공히 사상 분야 연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며, 개원 이래 추진되던 특성화된 연구 영역인 음악사와 미술사, 국어학과 고전문학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또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행정 및 관료제 연구와 민속학이 지속적으로 연구됐으며, 90년대 초반 국학 진흥사업이 개시되면서 고문서 및 이에 대한 역주와 탈초, 해제 연구가 새롭게 시작됐다. 다음으로 근현대 시기 연구는 교육사 연구가 많은 수를 차지했고, 현대사가 뒤를 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학진흥사업 내 근현대 자료 수집과 연구, 그 외 민주화 이후 자유로워진 연구원내 연구 환경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5-연구과제 빈도: 1990-1997

| 빈도 | 전근대         | 근현대      |
|----|-------------|----------|
| 1  | 사상(38)      | 교육사(30)  |
| 2  | 미술사(12)     | 윤리(22)   |
| 3  | 음악사(12)     | 현대사(22)  |
| 4  | 행정/관료(12)   | 이론(13)   |
| 5  | 고전문학(10)    | 국제관계(10) |
| 6  | 고문서(7)      | 공산권(9)   |
| 7  | 민속(7)       | 경제사(9)   |
| 8  | 역주/해제/탈초(7) | 식민지(8)   |
| 9  | 고대사(7)      | 종교사(8)   |

\* 해당 시기 연구과제 목록에 대한 필자의 전수조사에 기초해 작성. 주제/시기 등이 겹칠 경우 2중으로 빈도가 표기될 수도 있음.

71 『20년사』 122쪽, 169쪽.

두 번째, 국책연구기관 최초 '현대사연구소' 설립이었다. 독도/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 '한일역사 국책연구소' 구상 이후<sup>72</sup>, 1997년 4월 16일 각계에서 분산적으로 이뤄지던 현대사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현대사 연구의 중심적 위상, 유관 연구기관과 유기적 관계, 미발굴 및 수집, 정리되지 못한 현대사 관련 자료의 발굴, 수집, 정리 사료정보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현대사연구소가 설립됐다.<sup>73</sup> 1997년 해방이후 15년사, 한국현대사 인물연구, 해외학자 현대사 연구 분석 등 국내학술회의, 시민강좌, 자료조사연구실을 설치해 공모과제결과물인 녹음테이프 88개, 녹취물 7,034매 수집, 자체 구술자료 수집을 통해 녹음테이프 14개, 녹취물 1,371매 수집 등 '구술자료 수집', '주제별 자료수집 활동' 등을 전개했다.<sup>74</sup>

세 번째, 한국학의 국제화와 세계화 움직임이 연구 사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한소 수교 등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권과 수교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과 각종 학술대회 등 학술교류, 모스크바대 등과 교류 협정<sup>75</sup> 및 환태평양 국제한국학대회<sup>76</sup>, 한민족학술대회 개최가 이뤄졌다.<sup>77</sup> 특히 이영덕 원장 시기에 한국학의 세계화가 강조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해'로 변화시키기 위해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이관 및 강화(1997),<sup>78</sup> 한국학 세계화를 위한 세계적 한국학 연구소 구축을 위해 해외연구 역량의 결집 및 연계 체제의 구축이 제안된다. 더불어 한국학 원전 자료의 전산자료화가 시급성이 제안(1994)<sup>79</sup>되며 기존 도서관에 정보

72 「한일역사국책연구소 올 설립」, 《동아일보》, 1996년 8월 16일자.

73 「정권에 민감한 우리 현대사 사료 보존」, 《경향신문》, 1997년 4월 17일자.

74 『20년사』, 182쪽, 410-414쪽.

75 《경향신문》, 1991년 6월 30일자.

76 「탈냉전후의 한국학의 자리매김」, 《경향신문》, 1992년 7월 22일자.

77 《동아일보》, 1990년 6월 20일자.

78 「외국교과서 한국기술 왜곡 오류 많다」, 《동아일보》, 1990년 4월 25일자.

79 「주체적 민족문화 창달 노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매일경제》, 1991년 1월 20

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국학정보센터 설립(1996년 2월 1일)<sup>80</sup> 등이 이뤄졌다.

#### IV.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아래에서 연구원: 1998-현재

1998년 이후 정문연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개원을 주도한 권위주의 정치세력으로부터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집권이란 ‘여야 간 정권교체’, 사회적으로는 IMF경제위기 이후 공공기관 구조조정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국가 주도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가 고등교육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는 변화의 와중에 있었다.<sup>81</sup>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1997년 국회에서 다시 정문연이 전문적 학술연구 기관으로 정립되길 요구한다. 특히 정권교체 이후 19개 인문사회연구기관을 통폐합해 인문사회연구원(안)을 만드는 기관통합이 인수위에서 재논의된다.<sup>82</sup> 다시 연구원 존폐/통합에 대한 외부적 압력이 대두됐지만 1998년 8월, 김종필 국무총리의 방문으로 통합논의는 철회된다.<sup>83</sup> 동시에 1990년대 정문연이 국학, 고전번역에 치중되어온 것에서 21세기 국민정신연구로 치중할 것을 당부하는 등 다시 정문연 운영에서 제2건국 이념이란 외부적 정치적 요소가 강조된다.<sup>84</sup> 이는 이후 임명된 한상진 원장의 제2건국운동

---

일자; 「한국학자료전산화 급하다」, 《경향신문》, 1994년 11월 12일자.

80 《동아일보》, 1996년 1월 22일자.

81 천정환, 「2000년대 신자유주의 경쟁시스템의 도입과 영향에 관해서는 신자유주의 대학체제의 평가제도와 글쓰기」, 『역사비평』 92(2010); 김원, 「민족-민중적 학문공동체의 변화와 대안적 지식공동체」, 『지식의 현장 담론의 풍경: 잡지로 보는 인문학』(한길사, 2012) 참조.

82 「19개 연구기관 통합추진」, 《경향신문》, 1998년 1월 24일자.

83 《한겨레》, 1998년 8월 22일자.

84 《동아일보》, 1998년 10월 1일자.



참여 논란 및 정치권 영향력으로부터 다시 정문연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의혹 등 형태로 제기되었다.<sup>85</sup>

또한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정문연은 식당민영화, 차량최소화, 비서실과 상용직 등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원장이 공식인 상황에서 초기 구조조정 실적은 저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sup>86</sup> 동시에 출연금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관계 등에 있어서 연구원 위상 격하가 여러 차원에서 확인됐다.<sup>87</sup>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로 평교수 출신 한상진 원장이 취임하면서, 초기 불안감 등도 존재했던 동시에, 젊은 원내 연구진을 중심으로 개원 초기 학제간 연구의 장점을 원용해 제도적 실험이 전개됐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원 중심의 체제 개편이었다. 그 배경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과 연관됐다. 1999년 3월 15일 인문사회과학 분야 23개 연구기관은 국무조정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게 되었다. 당시 정문연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육부 소속 기관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체제개편이 이뤄졌다.<sup>88</sup> 1999년 3월 1일, 15차 기구개편으로 연합

---

85 취임 직후 교수협의회는 한국학 진흥, 연구자울성 보장 등이 담긴 「신임원장 취임에 즈음하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정문연 어디로 갈까」, 《경향신문》, 1999년 1월 8일자).

86 「일부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낙제점」, 《동아일보》, 1998년 12월 28일자; 「속도 느리고 허위실적 보고까지」, 《매일경제》, 1999년 1월 5일자.

87 단적인 예로 「한국학 1번지 결코 양보 못한다…… 국내 연구기관들 경쟁가속」(《동아일보》, 2003년 9월 15일자)을 보면, 한림대 한림과학원은 연간 20억 예산을 배정하고 기존 한국학 연구들이 인문학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과 달리 사회과학 중심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경우 한국학의 세계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부설기관인 국제한국학센터 개설 및 연간 약 30억 원의 연구비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연세대 국학연구원도 연간 30억 규모로 국학진흥연구단을 구성해 국학을 대학의 특성화사업으로 추진, 주요 연구 분야는 고문헌 및 고전문학, 국어학, 실학과 근현대사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88 『30년사』, 124쪽.

이사회 소속 정출연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 부원장 직제를 폐지하고 대학원 장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현대사연구소를 폐지해 원내 기구로 흡수했으며, 도서관을 장서각으로 변경했다. 같은 해 7월 19일 원장은 교수직에게 편지형식으로 당시 연구원에 대한 상황판단 및 동서양문화협동과정(동양문화와 인권/생태/여성 등) 신설에 대해 제안했지만,<sup>89</sup> 이는 7월 22일 교수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다수 노출되고 전체 교수 49명 가운데 37명이 협동과정 설치에 반대 서명을 하기에 이른다.<sup>90</sup> 이어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변경했으며 입학정원 80명, 4개 학부 13개 전공으로 세분했다. 연말인 12월 10일에 협동과정 신설 및 2개 전공 신설(한국문화와 세계문화, 고문헌관리학)이 이뤄진다.<sup>91</sup>

2000년 7월 5일, 17차 기구개편에서는 한민족문화연구소를 신설하여 한국학대학원과 병렬체제로 운영하고, 한국학대학원을 고전한국학부와 국제한국학부 2개 학부로 축소하며, 입학정원을 40명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이 제도 개편은 절차 문제와 구성원간 합의 부족 등으로 수용되지 못했고 교수협의회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후 협동과정 설치 등 대학원 개편, 직제개편, 고전자료에 기초한 축적된 연구 성과보다, 연구를 정책적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연구과제의 방향성, 연구비와 연구과제 관련된 개원 이래 첫 감사원과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대학원 운영, 조직 방안

89 당시 연구원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는 순수연구비가 극히 소액, 전공이기주의로 학제간 공동연구/강의추진 등이 어려움, 연구사업이 개인 선호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연구원 고유한 정체성이 약화되어 외부에서 연구원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고 언급하며,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강조한다. 대안으로 21세기 집현전 부활을 통해 한국학 세계화를 위한 지구적 시야가 필요하며, 협동과정 신설 및 이에 대한 교원 신규 임용이 필요함을 제안했다(『본원 교수 제위개』(1999년 7월 19일)).

90 『제11대 교수협의회 제3차 임시총회 자료』(1999년 8월 16일).

91 당시 한국학대학원을 아시아평화대학원으로 바꿔서 아시아 탑클래스의 대학원으로 만들려는 구상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한다.

운영 등에 대한 교직원 징계조치<sup>92</sup>, 직원 구조조정 등 사안에서 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 체제개편에 대한 불만/불신의 형태로 표출되었다.<sup>93</sup>

2년간의 한상진 원장 재임 이후에도 연구와 교육을 둘러싼 체제 개편은 이어졌다. 2005년 3월 2일, 20차 기구개편에서는 연구원직제가 2018년 현재 형태인 연구조직, 사업조직, 교육조직, 행정조직으로 개편되고, 부원장제 부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흡수하고, 국제협력처와 통합하여 한국문화교류센터로 개편, 연구사업 활성을 위해 연구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 1.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 변화

이 시기 여야 간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정부 정책 의제가 연구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단적인 사례로 제2건국운동, 교과서 왜곡, 고대사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동북고대사연구소’(가칭) 설립 논란<sup>94</sup>, 일본역사 왜곡 대응<sup>95</sup>, 현대사연구소 해산 등을 들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명칭과 정관의 변경이었다(2005년 3월 3일). 1997년 10월 1일, 제185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연구원이 한국학연구의 전문적 학술연구기관으로 방향

---

92 「정문연, 첫 종합감사」, 《동아일보》, 1999년 1월 26일자; 「정신나간 정문연 첫 제재」, 《동아일보》, 1999년 2월 24일자.

93 취임 4개월 이후 교수협의회에서 낸 『원장님께 교협에서 드리는 건의문』(1999년 4월)에는 대학원장 후보 복수 추천제, 교수업적평가 이사회 상정 전 교수회의 동의 요구, 기획과제의 사회과학 편중, 원장 원외 활동 자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94 「고구려사 연구센터 精文硏에 내달설치」, 《경향신문》, 2004년 1월 14일자; 《경향신문》, 2003년 12월 8일자.

95 「한국학중앙研, 일본 역사 왜곡 관련 심포지엄」, 《연합뉴스》, 2005년 3월 16일자; 한중연, 「일본 역사왜곡 반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년 7월 8일자.

을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이영덕 원장 아래 정신문화포럼 등의 사업내용을 비판하며, 다시 명칭 변경을 포함한 연구원의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교수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기획위원회와 원무회의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1997년 12월, 이사회에 상정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민족문화연구원'이라는 두 가지 명칭변경안은 토론을 거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결정되고, 관련 정관 개정안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육성법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sup>96</sup>

명칭 변경 과정은 외부의 요구와 내부적인 요청이 결합된 것이었다. 물론 「정신문화」라는 역사성을 고수하자는 주장도 존재했지만 큰 반발이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시각 역시 '중앙연구원'다운 위상 변화를 촉구했다. 당시 신문 사설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정문연은 이제 '정신문화'가 아닌 '한국학'이란 개념도 분명히 했고 '중앙'이란 이름도 얻었다. 이같은 변화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 이름만 변경한다고 해서 저절로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문연은 명실공히 '한국학의 본산'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sup>97</sup>

먼저 이 시기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학제간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전공별 연구실'이 폐지되었으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교수직 전원을 연구소에 소속시켰다(2001년 7월). 이듬해인 2002년 12월 30일에는 19차 개편을 통해 '민족문화연구소' 산하에 연구처를 신설하고 연구행정과를 연구처

---

96 『30년사』, 139쪽.

97 「사설: 정문연, 이름만 바뀌서는 안 된다」, 《경향신문》, 2005년 1월 5일자.

산하에 두었다. 이러한 개편은 2002년 이후 연구원의 상위 기관으로 '민족문화연구소'를 둬으로써, 한국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 위상 정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sup>98</sup> 하지만 1998년 이후 2-3억이란 소규모 연구비의 틀 안에서 20-30개의 공동연구가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를 통한 외부연구진과 네트워킹도 이전 시기보다 협소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아래 표6에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연구비/연구인력 규모 축소는 이 시기 연구원의 위상 불안정성과 연관된 것이었다.

표6-연간 연구과제, 연구참여자수 및 연구비 추이: 1998-2016

| 연 도  | 과제수 |     | 연구 참여자수 |     |     | 연구비<br>(단위: 천원) |
|------|-----|-----|---------|-----|-----|-----------------|
|      | 전체  | 세부  | 전체      | 원내  | 외부  |                 |
| 1998 | 40  | 40  | 133     | 58  | 75  | 346,950         |
| 1999 | 32  | 32  | 86      | 52  | 34  | 279,495         |
| 2000 | 21  | 21  | 99      | 51  | 48  | 279,399         |
| 2001 | 27  | 27  | 83      | 51  | 32  | 217,980         |
| 2002 | 27  | 28  | 79      | 46  | 33  | 228,460         |
| 2003 | 33  | 33  | 93      | 47  | 46  | 274,360         |
| 2004 | 29  | 29  | 87      | 49  | 38  | 316,040         |
| 2005 | 34  | 34  | 95      | 54  | 41  | 366,980         |
| 2006 | 31  | 31  | 114     | 75  | 39  | 393,750         |
| 2007 | 38  | 46  | 193     | 139 | 54  | 751,070         |
| 2008 | 39  | 39  | 99      | 57  | 42  | 409,170         |
| 2009 | 20  | 20  | 101     | 53  | 48  | 1,029,500       |
| 2010 | 17  | 17  | 118     | 65  | 53  | 921,500         |
| 2011 | 31  | 31  | 118     | 53  | 65  | 1,035,382       |
| 2012 | 44  | 44  | 237     | 65  | 172 | 2,138,276       |
| 2013 | 92  | 92  | 262     | 148 | 114 | 2,240,332       |
| 2014 | 126 | 126 | 301     | 163 | 138 | 3,462,160       |
| 2015 | 100 | 100 | 232     | 105 | 127 | 2,487,829       |
| 2016 | 64  | 64  | 298     | 111 | 187 | 3,391,313       |

\* 2014-2016년 연구과제의 수치는 정책과제와 한국학지형도를 제외한 수치로, 중복 참여한 연구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함.

98 『30년사』, 173쪽.

이런 불안정한 조건 아래에서도 역주 삼국사기 완간<sup>99</sup>, 순조문집, 장서각 소장고소설자료집 등 발간<sup>100</sup>, 고문서 사업<sup>101</sup>, ‘동북아 역사총서’ 발간<sup>102</sup>,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시리즈 발간’(1999-2005)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sup>103</sup> 이 시기 연구는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전근대 및 근현대 시기 연구 경향이 초기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다. 표7을 보면, 먼저 전근대 시기는 여전히 사상 분야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고, 두드러지는 변화는 국학진흥사업에 기초한 고문서 수집과 장서각 소장 자료에 대한 각종 역주/탈초/해제 연구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 민속, 인문지리, 문학, 음악과 미술 등 거의 대부분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성격이었다. 다음으로 근현대 시기의 연구는 현대사, 북한/통일, 종교사, 교육사, 경제사 등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연구영역이 활성화됐다. 특히 이 시기 출간된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1999-2005> 시리즈(총 26권)는 90년대 한국현대사

표7-연구과제 빈도: 1998-2007

| 빈도 | 전근대           | 근현대       |
|----|---------------|-----------|
| 1  | 사상(37)        | 현대사(13)   |
| 2  | 역주/해제/탈초(19)  | 북한/통일(13) |
| 3  | 장서각 소장 자료(12) | 종교사(13)   |
| 4  | 고전문학(11)      | 교육사(10)   |
| 5  | 음악사(10)       | 교육사(9)    |
| 6  | 교육사(6)        | 경제사(8)    |
| 7  | 왕실문화(6)       | 민족문제(7)   |
| 8  | 국어학(6)        | 여성(6)     |
| 9  | 미술사(6)        | 이주/이민(6)  |

\* 해당 시기 연구과제 목록에 대한 필자의 전수조사에 기초해 작성. 주제/시기 등이 겹칠 경우 2중으로 빈도가 표기될 수도 있음.

99 《한겨레》, 1998년 2월 11일자.

100 《한겨레》, 1998년 7월 15일자.

101 《경향신문》, 2003년 12월 22일자.

의 연구영역 및 분야를 집대성한 중요한 연구 성과였다. 이 시리즈는 모두 연구원 공동연구과제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연구 영역의 확장과 정착을 반영하기 위해 2005년, 9개 자율연구소를 설치해 연구 프로젝트 영역별로 고전학연구소, 생활사연구소, 지혜와 가치 연구소, 세종국가경영연구소, 가족문화연구소, 문화와 놀이 연구소, 현대사연구소, 한민족공동체연구소, 종교문화연구소, 동북아고대사연구소, 기초한국학연구소 등을 설치했다.<sup>104</sup> 이러한 흐름은 인력, 체제, 연구비 등이 결합되고 연구소의 연구프로그램이 대학원과 접목된다면 '이상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2006년 말, 일부 연구소의 활동 부진과 9개의 연구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1월 1일자로 5개 연구소로 재편되었다. 이후 5개 중점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학 기초·중점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각종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도 5개 연구소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2007년 한해 총 42회의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가 개최됐다.<sup>105</sup>

대학원 교육과 관련해서, 2002년부터 교수직 공채가 시작되었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교원의 대우 및 기준을 상승시켰다.<sup>106</sup> 동시에 대학원 체제에 있어서 일반 국립대학 대학원과 비슷하게 전체 강좌 수, 교수 1인당 강의 의무화 등이 점차 가시화됐다. 2003년 9월 4일에는 대학원학칙규정 제20차 개정을 통해 해외한국학 계열이 신설되어 총 7개 계열과 입학정원 40명으로 대학원 운영이 변화했다.

---

102 《연합뉴스》, 2005년 12월 2일자.

103 《경향신문》, 1999년 3월 12일자.

104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소 중심 개편」, 《연합뉴스》, 2005년 3월 2일자.

105 『30년사』, 174쪽.

106 장을병 구술, 이완범 면담(2007년 1월 11일), 연세대학교 알렌관; 이상주, 『부러지지 않는 집념』(학지사, 2016), 254-255쪽.

다음으로 연구와 교육이란 2개의 중심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원내 기구 및 연구 사업이 유치되고 제도화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첫 번째, 2001년 원무회의가 최고의결기구로 제도화되었다. 두 번째로,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이 강화됐다. 2003년 2월 6일에 장을병 원장과 한국교육개발원 이종재 원장 간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 대한 합의문” 조인이 이뤄졌다.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한국학지원 사업을 이어 받았으며,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작했으며<sup>107</sup> 2002년부터 세계한국학대회가 시작되었다.<sup>108</sup> 세 번째로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이하 향전)이 시작된 것이다. 2003년 7월 23일, 향전이 제도화된 배경으로는, 정부의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지방문화의 집대성 및 지식문화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연인원 2만여 명의 전문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10년간 1,16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sup>109</sup>

그밖에도 연구원 지방 이전 저지,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sup>110</sup>, 1999년의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으로 183명에서 144명으로 축소되어 오던 정원이 2008년 초에 203명으로 증가되었으며, 10년 만에 정규 연구직 정원 27명을 확보하였다. 예산 규모 또한 1998년의 89억에서 2007년 177억 원으로 증대되어 신장서각 건축 등 한국학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고, 출연금 이외에도 수탁사업 등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갔다.<sup>111</sup>

---

107 『30년사』, 153쪽.

108 《동아일보》, 2002년 7월 16일자.

109 《동아일보》, 2003년 7월 29일자.

110 「정부산하 연구기관 국민연금 탈출 잇따라」, 《연합뉴스》, 2007년 6월 11일자.

111 『30년사』, 154쪽.



## 2. ‘한국학’의 연구 중심과 방향

2008년을 즈음으로 한 시점은 연구원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국면이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학진흥사업단(출범 당시 한국학기획사업단 2006년 10월 24일) 출범 이후 연구비와 한국학 콘트롤센터로서 기능 부여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란 보수정부의 출범과 연관된 문제들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학기획사업 TFT <한국학장기 발전사업 연구팀> 등으로 연구원은 10여년 만에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sup>112</sup> 사업단 예산은 54억(2008년), 162억원(2009년), 191억(2010년), 220억(2011년), 273억(2012년), 288억(2013년)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2008년 취임한 김정배 원장은, “일반대학이나 개인 학자들이 수행하기 힘든 대규모 기초연구와 학문적 기반사업을 중심으로 한중연의 고유한 특성과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 진행을 천명했다.<sup>113</sup> 뒤이어 2011년에 취임한 정정길 원장의 경우도, 한일 과학기술사 비교연구 프로젝트<sup>114</sup>, ‘한국적 가치의 재정립: 한국의 정신적 자본·정신문화 발전 연구 사업’, ‘한국학 연구정보의 집대성을 위한 연구지형도 구축사업’, ‘글로벌 시대의 한국적 가치와 문명연구 사업대형연구사업’을 추진했다.<sup>115</sup>

---

112 그 전사(前史)로는 2005년 해외에서의 한국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학 진흥위원회’가 구성되었다(「한국학 진흥위 구성. 27일 첫 회의」, 《연합뉴스》, 2005년 7월 10일자). 같은 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17일부터 3일 동안 개최한 세계한국학자대회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의 한국학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이 19일 채택됐다(「해외한국학자들, “한국정부, 기업 한국학 지원 절실”」, 《연합뉴스》, 2005년 10월 20일자).

113 새로 취임한 연구원 원장의 기자간담회가 시작된 시점도 2008년경부터였다(《한국경제신문》, 2008년 5월 6일자).

114 《연합뉴스》, 2012년 1월 11일자.

115 《연합뉴스》, 2013년 3월 12일자.

다만, 이러한 연구원에 대한 학계/사회의 주목 역시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서 추동된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인 연구의 틀과 형식은 안정화되었지만, 기관장 교체,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유동적인 면이 존재했다. 실제로 보수정부로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전 10년간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어졌고, 기관장의 정치적 성향 논란(2014), 교육부 과잉감사로 인건비를 과다 집행, 교수 수 등 운영문제 제기<sup>116</sup>나 국회예산정책처, 대학원 강의시수 및 연구실적<sup>117</sup> 등은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동시에, 외부의 비판적 시선을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 운영의 주도권/패라다임의 변화도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연구원 운영은 교수진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컸지만,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기관장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함에 따른 갈등이 발생했다. 단적인 예로 교수 임용 및 보직자 임명, 연구과제에 대한 영향력, 정부정책과 연구원간 관계, 보직자 및 연구과제 일부의 쏠림 현상, 연구원의 자율성의 침해 등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거나, 본부와 구성원 간 의사소통 구조의 악화는 구성원의 내부적 반목으로 귀결되어 조직문화가 악화된 측면도 존재했다.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 기관장과 일부 연구원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됨으로 인해 연구원 구성원 의사와 무관하게 연구원이 외부로부터 ‘과잉정치화’된 일도 존재했다. 단적인 사례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논란(보수필자-원장 10억 연구사업 좌지우지)<sup>118</sup>’, 「정문연 시절로

116 《연합뉴스》, 2012년 7월 11일자.

117 《세계일보》, 2013년 7월 5일자.

118 《한겨레》, 2014년 8월 25일자.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3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1,690백만 원 중 10억 원을 2015년 광복기념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사업비로 편성할 것을 안으로 올린 바 있다(『2014년 제78차 정기이사

되돌아가려는 한중연<sup>119</sup>, 「한중연, ‘이념 편향’ 교사 연수 논란」<sup>120</sup>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 연구원 구성원들 다수는 이에 반대했다. 단적인 예로 2015년, 교수진의 2차례에 걸친 국정화 반대 성명(「역사학 전공교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sup>121</sup>; 「29명 교수, 국정화 철회 요구 성명」<sup>122</sup>)을 냈고 이는 대학원과 동문회까지 「재학생, 수료생, 졸업생들 129명, 국정화 반대 성명」<sup>123</sup>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율성을 둘러싼 갈등은 연구원 조직내부지향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이 와중에 연구원과 한국학의 전망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지체되고 구성원 간에 논의는 공전됐다.

2008년 이후 10년간 연구에서 변화한 점은 연구과제 공모 개시(2009), 단기 공동연구과제 중심으로 정착됐다. 대표적인 연구과제의 형식은 표9에 보는 바와 같이 한국문화심층연구, 글로벌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 연구, 한국학지형도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한국학대중화사업(2015) 등이었다.<sup>124</sup> 뿐만 아니라 연구 예산과 외부 참여 연구자의 숫자도 급속히 증가했다. 2008년 4억 수준의 연구비는 2016년에는 33억으로 8배 정도로 늘었다. 2008년에 42명에 불과했던 외부연구진의 연구과제 참여도 2012년과 2013년에 들어서는 114명과 172명으로 크게 늘었다(표6 참조). 좀 더 구체적인

---

회 회의록』(2014년 3월 31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본관).

119 《경향신문》, 2014년 5월 20일자.

120 《한겨레》, 2014년 8월 25일자.

121 《한겨레》, 2015년 10월 27일자. 당시 관련 성명은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2015년 10월 27일자) 참조.

122 《한국경제신문》, 2015년 10월 30일자. 연구원 교수 차원의 성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의 입장」(2015년 10월 30일자) 참조.

123 《한겨레》, 2015년 11월 4일자.

124 당시 이사회에서는 당초 정문연 설립 당시 목적인 정신문화에 대한 연구의 부족, 관광산업에 스토리가 필요하니 문화유산 중 재밌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2013년 제60차 임시이사회 회의록』(2013년 1월 17일, 조선포털 나인스 게이트 비너스룸)이나 대중화 및 일반 시민 교육프로그램 필요, CEO 대상 대학원 개설 검토 필요(『2013년 제6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2013년 2월 2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본관) 등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전근대 시기 연구는 고문서 수집에 기초한 역주/탈초/해제 및 학제 간 다양한 연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며, 장서각 소장 자료에 기초한 왕실문화 연구도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사상사, 고전문학, 민속, 음악사와 미술사와 더불어, 인문지리, 고대사와 고고학분야의 연구도 활성화됐다. 이 시기에 이르면 전근대 시기 연구는 국학진흥사업을 통해 수집, 확장된 고전적, 고문서, 장서각 소장 자료 등에 기반한 연구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안정화/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근현대 시기의 연구는 현대사, 식민지 시기, 종교사 등 기존 연구 영역에서 지속적인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들어서 한류와 문화연구 등이 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 외에 이주, 여성, 노동, 시민, 인권, 인물에 대한 연구를 문화사, 사건사, 주제별 사전(공구서)이나 소스북 등을 통해 연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

표8-연구과제 빈도: 2008-2016

| 빈도 | 전근대           | 근현대         |
|----|---------------|-------------|
| 1  | 역주/해제/탈초(32)  | 문화연구(15)    |
| 2  | 고문서(21)       | 현대사(15)     |
| 3  | 왕실문화(17)      | 종교사(13)     |
| 4  | 고대사(17)       | 식민지(13)     |
| 5  | 사상사(16)       | 북한/통일(8)    |
| 6  | 장서각 소장 자료(14) | 인물(8)       |
| 7  | 인문지리(13)      | 이주/이민(8)    |
| 8  | 고전문학(11)      | 노동/시민/인권(7) |
| 9  | 음악사(11)       | 여성(5)       |
| 10 | 교육사(9)        | 의식조사(5)     |
| 11 | 국어학(7)        | 경제사(4)      |
| 12 |               | 교육사(4)      |

\* 해당 시기 연구과제 목록에 대한 필자의 전수조사에 기초해 작성. 주제/시기 등이 겹칠 경우 이중으로 빈도가 표기될 수도 있음.

표9-최근 10년 원내 과제 형태 변화

| 연도        | 과제명      | 과제형태  | 기간    | 선정 형태                   |
|-----------|----------|---|-------|-------------------------|
| 2008-2009 | 한국문화심층연구 | 공동연구과제<br>단독저술과제  | 1년    | 공모                      |
| 2011      | 한국문화심층연구 | 공동연구과제<br>사전편찬과제<br>한국학모노그래프과제(단독)  | 1년/다년 | 공모                      |
| 2012      | 한국문화심층연구 | 공동연구과제<br>사전편찬과제<br>한국학모노그래프과제(단독)<br>한국학탐구과제<br>글로벌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 연구(공동)                            | 1년/다년 | 공모                      |
| 2013      | 한국문화심층연구 | 공동연구과제<br>번역연구과제<br>한국학모노그래프과제(단독)<br>한국학탐구과제<br>글로벌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 연구(공동)                            | 1년/다년 | 공모                      |
| 2014      | 한국문화심층연구 | 공동연구과제<br>번역연구과제<br>한국학모노그래프과제(단독)<br>한국학탐구과제<br>글로벌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 연구(공동)                            | 1년/다년 | 지정 (3개 연구센터별로 사전 과제 설정) |
| 2015      | 한국문화심층연구 | 공동연구과제<br>번역과제<br>한국학모노그래프(개인)<br>글로벌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 연구(공동)<br>한국학연구지향도<br>고전자료의 현대화                  | 1년/다년 | 공모                      |
| 2016      | 한국문화심층연구 | 공동연구과제<br>번역과제<br>한국학모노그래프(개인)<br>글로벌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 연구(공동)<br>고전자료의 현대화(공동)<br>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스토리 연구(공동) | 1년/다년 | 공모                      |

한편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 개원 초기 학제간 연구의 장점 도입 시도 등도 존재했지만, 전공과 계열 등을 둘러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개편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이 진행되다가 대부분 원상 복귀되거나 갈등/혼란이 가중되곤 했다. 단적인 예가 전공간 통합/분리, 교원의 연구소 소속 및 대학원 소속 문제, 불분명한 위상의 별도 연구소의 대학원내 설치 등(융합한국학부)과 한국학고등연구소 설치<sup>125</sup>, 인문정신문화연구센터, 글로벌리더십연구센터 설치 등을 둘러싼 내용이었다.<sup>126</sup>

## V. 맺음말

---

서로의 땅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사유하며 타자의 존재를 상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 내에서 일어난 일과 겹쳐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타자의 존재를 상상하고 이야기할 때, 담론공간은 적극적으로 타자를 받아들일게 될 것이고 탈식민화로 향하는 장이 될 것이다.<sup>127</sup>

이상에서 살펴본 개원 이후 연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학 연구기관으로서 성격 규정, 한국학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와 학제적인 한국학 연구, 기관의 자율성 확보, 중점사업 개발의 필요성, 대학원의 특성화,

---

125 《연합뉴스》, 2014년 12월 31일자.

126 연구원 운영, 전공통합 등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교협은 『원장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2009년 5월 21일), 『한국학대학원 전공통합 학칙개정에 대한 교수협의회 입장』(2010년 7월 23일)을 참조. 그 외 2010년대 중반 연구소, 연구센터 등 직제 개편에 대한 문제는 『교수의 연구소/연구센터 배속과 관련된 요청서』(2016년 1월 1일) 등을 참조. 전반적 언론 보도는 《연합뉴스》, 2014년 12월 31일자 등 참조.

127 오세중,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소명출판, 2019), 331쪽.

연구결과의 확산 등 『개원 20년사』에서 제기했던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sup>128</sup>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연구원 40년의 역사에 대한 개괄적 평가에 기초해 2019년 현재 한중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국학 연구의 방향에 있어서 ‘민족문화’에서 이문화(異文化), 통일, 아시아라는 가치를 포괄하는 연구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원 당시 정신문화-민족문화라는 연구의 가치는 민주화 이행, 지구화/신자유주의, 사회적 양극화 또한 최근 동시아/남북관계의 급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이에 맞는 기관운영 및 연구과제 설정이 요구될 것이다.

과거 국학은 민족/민족문화의 ‘빈 기표’를 찾기 위해 제기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학’ 그리고 이로부터 연상되는 국사학, 국문학 등으로 지칭되던 범주에 내재한 자기폐쇄성, 자기충족성 그리고 민족주의적 경향은 역설적으로 한국을 ‘대한민국’이란 민족국가란 범주-이 범주는 서구의 근대/혹은 제국의 지역학이 창출한 범주-안에 갇히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자생적 이론’이나 ‘학문의 국적성’이 여전히 강조되는 맥락은 탈냉전, 세계화라고 불리는 시기에도 ‘결핍된 보편성’에 대한 욕망의 일환일 것이다. 바로 그간에 한국학에 대한 입장 차이 자체가 오히려 한국학을 둘러싼 상상력을 제약해오고 근대, 국가, 발전 등 주어진 범주/개념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게 만들었다. 이제 한국학은 그 사유의 범위를 남/북한-한반도 더 나아가 아시아라는 범위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주제와 방법에서 상상력을 확장시킬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결론 서두에서 인용한 글은 냉전 시기 오키나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불가시화된 오키나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글이다. 오키나와를 그리고 그

---

128 『20년사』, 211쪽.

틈새에 존재한 조선인을 사유하는 것은 ‘낮선 오키나와’만을 사유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는 공간과 그 안에서 냉전/식민주의로 유명처럼 불가시화된 타자들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임을 이 글은 드러내 준다.

앞서 소개한 연구처럼 이제 자국학/일국적 시야를 넘어서는, ‘비판적 지역학’으로 새로운 가치 정립 시도가 필요하다.<sup>129</sup> 한국학은 좁게는 동아시아, 아시아 그리고 다른 국민국가군/문화와 어떻게 스스로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천착이 필요할 것이다. 그간 한국학이 대한민국이나 한반도 혹은 한반도 출신 종족집단을 중심적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면, 이제 식민, 냉전, 분단, 급속한 자본주의화와 정치변동을 겪은 사회와 ‘학문적 관계 맺기’를 통해 비교역사적 연구에 기초한 연구방법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남북간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양 체제 모두 반공주의적 국민주체와 반제국주의라는 국민적 주체를 생산하기 위해 민족, 전통이 활용되어왔고, 그 안에는 상대 체제에 대한 ‘적대감’이 깊숙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제 중심, 발전, 근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족, 전통에 구한된 한국학이 아닌, 한국(학)이란 범주, 대상에 대한 의심, 타자의 입장에서 한국을 사유하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국민문화’를 지칭해온 한반도 절반을 의미해온 민족문화나, ‘남한학’으로서 한국학이 남북관계의 점진적 변화, 동아시아 역내 간 평화 구축 등의 현실 속에서 개념/범주로서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와 교육의 연계 및 특성화다. 1990년대 후반 연구재단 출범 이후 세분화된 전공과 수량적 수월성에 기초한 연구 논문이 강조되기

---

129 채오병(2014), 앞의 논문, 320-322쪽.



시작했다. 인문한국 사업을 통한 한국학/지역학 연구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융합 학문으로서 성공적이지 못했다.<sup>130</sup> 한중연은 변화하는 외부환경이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즉 각종 한국학연구소 등장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한중연은 연구/교육에서 특성화의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한중연의 존재근거와 연관된 문제다.

연구영역에서 견지해야 할 지점은 시기/분야별 균형감/다원성의 확보이다. 월내 연구진을 시기별로 보면 전근대/전통시대와 근현대 시기 전공자의 비중은 5:1 정도로 불균등한 상태다. 이런 조건은 향후 한국학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세계한국학의 흐름과 연구원 연구/교육 간의 균형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한국학계의 가장 큰 관심은 젠더, 북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젠더, 조선시대, 식민지/근대 시기다. 최근 3년간 미국아시아학회(AAS) 연례 학술회의에서 열린 한국학 관련 패널에서 다룬 주요 주제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10과 같다.

표10-미국아시아학회 한국학 관련 패널 주제의 추이: 2016-2018

| 연도   | 문화연구 | 젠더 | 북한 | 조선사 | 식민시기 |
|------|------|----|----|-----|------|
| 2016 | 7    | 2  | 1  | 2   | 2    |
| 2017 | 9    | 3  | 0  | 4   | 2    |
| 2018 | 5    | 7  | 6  | 3   | 4    |
| 합계   | 21   | 12 | 7  | 9   | 8    |

\* 이 표는 필자가 AAS 홈페이지에서 찾은 2016-2018년 연례회의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해서, '한국관련 패널'만 추출해 정리한 결과임.

130 「'인문한국 10년' 종료…… 인문학도 '일몰' 되나」, 《한겨레》, 2018년 6월 7일자.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 1990년대 후반 학술진흥재단 설립 이후 등재학술지, 대학평가 등 도입되면서 분과학문 체제와 세분화된 전공분야가 강화되었다. 1990년대와 현재는 연구를 둘러싼 환경 및 한국학이 다루는 범위와 방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됐다. 2019년 현재 연구원 구성원들도 연구와 교육 연계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다. 단적인 예로 장기 연구과제와 협동강의가 결합된 수업을 요구하는 층이 적지 않다. 물론 빈번한 제도 개편으로 인한 대학원생의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하지만, 백화점 나열식 전공보다, 근거와 타당성을 지닌 중점적인 대학원 편제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국내 한국학 수요를 포함해서 대학원과 세계적인 한국학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학’에 대한 특성화와 교육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혹은 일본 니치분케이(人文研)나 국내 대학의 자유전공 등을 참조해서 ‘주제별’로 대학원 과정을 학제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지점은 ‘연구/교육의 연계’ 및 장기적으로 ‘다른 형태의 고등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실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일반대학원과 구분되는 교과과목 구성함으로써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 한국학계의 가장 큰 관심인 젠더, 북한, 문화연구, 현대문학, 젠더 등 해외한국학 연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국문화분야, 한국학 및 전공기초분야, 연구과제와 연계된 학제간 분야를 교과목으로 특화시키거나 역사를 중심으로 교과과목 재편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개원 당시 구성원, 연구원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민족문화라는 내용을 채우기 위한 1978년 당시 과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1980년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시기를 경험한 구성원은 많지 않다. 오히려 2000년대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이란

명칭으로 들어온 교원의 수가 70%가 넘을 정도다. 개원 초기 대규모 연구과제가 부재한 시기에 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부차원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연구 영역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제도화된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민족의 시대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년 사이에 단일민족, 혈통과 문화에 기초한 민족정체성보다는 지구화, 인종/종족, 탈국경/탈경계가 강조되고, 정치나 경제보다는 문화, 세대, 젠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변환'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국학을 규정해온 한반도 내 역학도 지난 10여 년간을 지배해온 '사라지지 않은 냉전'에 변화의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40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어려운 정치적 상황과 외부의 시선 속에서도 꾸준히 한국학의 토대를 마련해왔고, 그 필요성을 국내외에 확산시켜왔다. 이제 굳건한 한국학의 토대에서, 다른 사회의 문화, 냉전과 통일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라는 가치를 포괄하는 연구방향을 위한 '새로운 한국학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다가올 앞으로의 100년'을 일구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十年史』.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二十年史』.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8.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30년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정신문화연구』(초기 『정신문화』).
- 『이사회회의록』.
- 『교수협의회 회의록』.
-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 2. 단행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민연 50년: 1957-200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대동문화연구원: 1958-200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국학연구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 오세중,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소명출판, 2019.
- 이상주, 『부러지지 않는 집념』. 학지사, 2016.
- 조동일, 『학문에 바친 나날 되돌아보며』. 지식산업사, 2004.

### 3. 논문

-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사회와 역사』 64, 2013, 150-159쪽.
- 김왕배, 「아시아의 작은 용: 한국학의 성장과 부흥(1970-1999)」. 『사회와 역사』 57, 2000, 215-248쪽.
- 김원, 「1960년대 냉전의 시간과 뒤틀린 주체: 시민의 시간과 민족의 시간」. 『근대화론과 냉전 지식 체계』, 해안, 2018, 75-108쪽.
- \_\_\_\_\_, 「민족-민중적 학문공동체의 변화와 대안적 지식공동체」. 『지식의 현장 담론의 풍경: 잡지로 보는 인문학』, 한길사, 2012, 75-138쪽.
- \_\_\_\_\_, 「발굴의 시대: 경주 발굴, 개발 그리고 문화공동체」. 『史學研究』 116, 2014, 500-542쪽.

- \_\_\_\_, 「한국적인 것의 전유를 둘러싼 경쟁: 민족중흥, 내재적 발전 그리고 대중문화의 흔적」. 『사회와 역사』 93, 2012, 185-200쪽.
- 김현주, 「『동방학지』와 국학, 동방학 연구: 『동방학지』를 통해 본 한국학 종합학술지의 궤적」. 『동방학지』 151, 2010, 49-108쪽.
- 서은주, 「1970년대 '민족문화' 담론과 한국학」. 『어문논집』 54, 2013, 381-390쪽.
-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 1998, 121-152쪽.
- 윤해동, 「에피고넨의 시대,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묻는다」. 『민족문화논총』 47, 2011, 29-58쪽.
- 이봉범, 「한미재단(American Korean Foundation), 냉전과 한미 하방연대」. 『한국학연구』 43, 2016, 205-259쪽.
- 이태진·임형택·조혜정·최원식, 「좌담: 지구화시대의 한국학: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의 긴장」. 『창작과비평』 25(2), 1997, 8-62쪽.
- 이하나, 「유신체제가 민족문화 담론의 변화와 갈등」. 『역사문제연구』 28, 2012, 41-62쪽.
- 장세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동아시아,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 『상허학보』 36, 2012, 87-140쪽.
- 정종현, 「아시아재단의 "Korean Research Center(KRC)" 지원 연구」. 『한국학연구』 40, 2016, 57-108쪽.
- 조동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나아갈 방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의 회고와 전망』,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년 6월 22일, 14-17쪽.
- 채오병, 「냉전과 지역학: 미국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그 파열, 1945-1996」. 『사회와 역사』 104, 2014, 311-322쪽.
- 천정환, 「신자유주의 대학체제의 평가제도와 글쓰기」. 『역사비평』 92, 2010, 185-209쪽.
- 최기숙, 「1950-1960년대 인문학 학회지에서의 한국학 연구 구성의 특징: 개념·범주·방법론」. 『열상고전연구』 33, 2011, 265-301쪽.
- 한기형, 「대동문화연구원 50년의 학술연구 성과: 대동문화연구원의 현재와 미래: 동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한국학의 재정립」. 『대동문화연구』 60, 2007, 107-125쪽.
- 허은, 「냉전시대 동아시아지역의 미국학 확산과 '知的네트워크' 구축」. 『아세아연

구』 60:1, 2017, 111-115쪽.

황병주,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탈후진 근대화' 담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2008, 239-250쪽.

\_\_\_\_\_,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새롭게 이해하는 민족과 민족주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의 회고와 전망』,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년 6월 22일, 95-96쪽.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78년 개원한 한국학중앙연구원(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개원과 더불어 냉전 하에서 80년대 민주화 이행 이전 시기, 민주화 이행 이후 90년대 후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도입된 현재까지 세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기관으로서 의의를 평가하고, 이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978년 정문연의 개원은 한국학 연구의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제1기에는 광범위한 국내 연구진의 결합에 기초한 한국학에 대한 학제간 연구, 사전과 분류사 등에 대한 연구, 제2기에는 한국학 기초자료의 수집과 연구 토대, 한국학의 세계화, 사료에 입각한 연구라는 한국학 연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물론 이는 각 시기별 정부정책, 연구기관의 특수한 문화, 운영 체계의 특수성, 조직원 간의 의사소통과 조직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국민정신교육이 강조되던 시기에도, 민족문화에 기반한 백과사전 편찬, 민속, 구비 그리고 방언에 기초한 전통문화의 발견 그리고 사상사, 사회사, 자료사 대계가 전근대와 근대 시기를 망라하는 동시에, 당대 인문·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학제간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바로 한중연의 존재 의의는 현재 한국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었다.

2000년대 이후 한중연의 존재의의는 장서각 자료에 기초한 왕실문화, 고전 문학 등에 대한 어학, 문학, 예술, 역사, 사상 등 학제간 연구가 제도화된 연구과제 형태로 정착됐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근대 및 근현대 분야의 각종 사전(공구서), 국내 근현대 1차 자료에 대한 영문번역을 통한 소스북 발간, 고전자료의 현대화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이들 흐름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제기했던 민족문화의 개념을 세분화된 차원에서 확장한 연구한 동시에, 개념, 사건 그리고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 개념의 원천을 탐구한 시도였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국학진흥사업과 현대사연구소를 통한 근현대자료의 집성,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과 구비문학증보사업을 통한 대규모 자료의 집적은 해당 분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2000년대 확산시켰다. 특히 근현대 시기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사료라는 역사적 기반을 둔 연구들이 90년대 중반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부각되기보다 특정한 정치적 외부 논리에 의해 연구원이 평가되어온 이유는, 정책변화, 기관장 교체 등에 의한 불안정화/대립적 조직문화의 재생산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1978년 개원 이후 주요한 논쟁은 '연구'와 '교육'의 비중 간의 긴장이었으며, 연구원의 전망 역시 각종 연구조직, 연구소 개폐, 대학원 직제개편 등을 둘러싼 연구와 교육이란 두 가지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자원을 집중해 나아가는 방향을 둘러싼 문제이다.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둘러싼 연구원 성격 규정, 한국학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와 학제적인 한국학 연구, 기관의 자율성 확보, 중점사업 개발의 필요성, 대학원의 특성화, 연구결과의 확산 등 『개원 20년사』에서 제기했던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10여 년의 역사를 반추한다면, 향후 연구와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적어도 2018년 현재 어느 정도 합의 가능한 한중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연계'와 '일반대학이나 한국학연구소에서 하기 어려운 장기적 연구'를 통한 특성화라는 '총론'일 것이다.

투고일 2019. 4. 1.

심사일 2019. 4. 8.

게재 확정일 2019. 5. 27.

주제어(keyword) 한국학(Korean Studies), 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Academy of Korean Studies), 연구(Research), 교육(Education), 냉전(Cold War), 민주화 이행(Democratic Transition), 민족문화(National Culture)



## Abstracts

### Cold War, Democratic Transformation and Korean Studies : 40 Years of Performance and Meaning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im, Won

This study focused on the Cold War, the transition to democracy, the late 1990s and the three periods to date, with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valuating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as a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nd then reviewing the direction to move forward.

The opening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1978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reated a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Korean studies. In the first period, the institute built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Korean studies, includ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based on the combination of broad researchers, dictionary and classification history studies, and the collection of historical source on Korean studies in the second period, and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In the 1980s, the compilation of encyclopedias, the discovery of national culture, and the study of thought history, social history were also conducted. At the same time, it laid the foundation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vering all areas of Korean studie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2000s, interdisciplinary research based on Jangseogak source has been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research project. Secondly, various studies based on the modernization of various dictionaries and classical materials in modern and contemporary fields have been expanded. Such research was an attempt to expand the concept of national culture, while exploring the sources of Korean studies, focusing on concepts, events and source.

In addition, the collection of large-scale research source through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project, oral history research project and korean studies on pre-modern period project has spread the interest of academia in the field. Despite various research achievements since the 2000s, the reason why researchers have been evaluated for certain political logic rather than for their achievements has been because of changes in policy, instability of organizations

due to the replacement of heads of institutions, and the reproduction of confrontational organizational culture.

Over the past 40 years, the main debate within the researchers has been tension over the importance of 'research' and 'education.' The tasks raised in the 20 years history of the opening of the institute, including stipulating the nature of researchers surrounding research functions and educational functions, establishing the scope of Korean studies, securing autonomy of institutions, the need to develop intensive projects, specialization of graduate schools and the spread of research results, are still valid. Currently, the direction of korean studies should move forward is "link between Korean studies and education" and that it is a specialization through long-term research that is difficult to do at ordinary universities or other Institute of Korea studies.